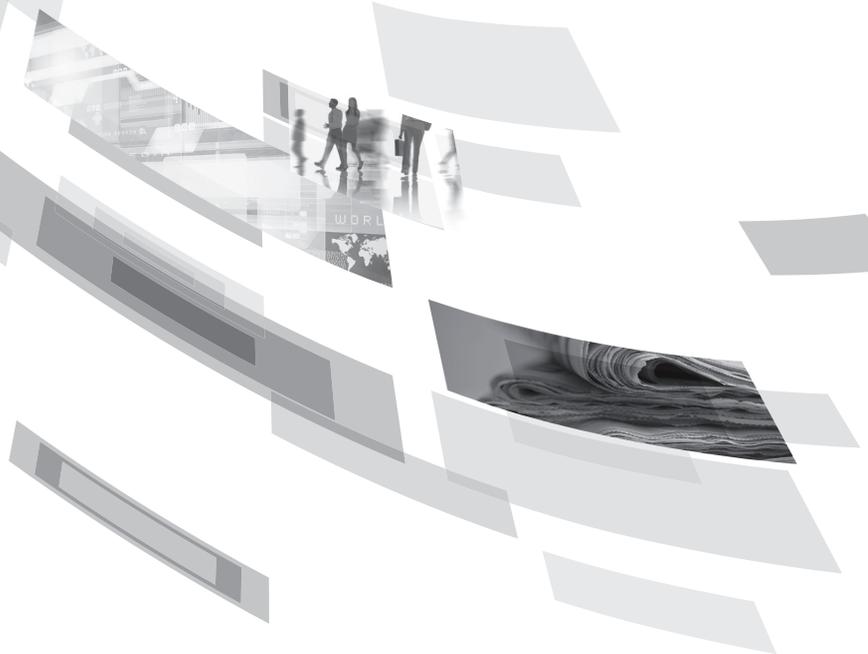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 2014-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4년 4월 18일자 A1면 「기상악화로 구조 난항 … 1분1초와의 사투」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매일경제 4월 18일자 A1면

연합뉴스 사진

매일경제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4월 17일 13:57에 송고한 사진인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6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문>

경남매일 2014년 8월 29일자 19면 「실효성 의문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제

목의 사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영어 과목의 절대 평가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며 큰 방향은(절대 평가쪽으로) 잡혀 있다”면서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 십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따를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2018년 수능부터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외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사고와 과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폐지를 추진 중인 자사고의 경우 학과목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선 입시준비가 수월하다. 이로 인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뚜렷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교육부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는 사교육비 경감과 영어교육의 정상화, 학업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영어 한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번 조치로 수학에 흥미가 없어 문과를 택한 학생의 경우 입시 관문을 통과하기가 훨씬 불리해졌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통계를 보면 회의적이다. 수학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오지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일그러진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선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를 폭넓게 듣고 이과와 문과의 특성에 맞춘 수능 과목과 배점의 차별화, 고교 교과내용및 범위의 적정성, 고교 교육과 연계된 수능 평가방식 등을 두루 연구·검

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사실은 연합뉴스가 8월 28일 15:45 송고한 「실효성 의문시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제목의 ‘연합시론’을 전재하다시피 한 것이다. 사실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이로 인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뚜렷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만 새로 첨가됐을 뿐 나머지 문장들은 ‘연합시론’과 철자까지 똑같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이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신문사의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91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10월 2일자 36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佛서 ‘정상적 대학생활’/‘아버지 만났나’ 묻자 “그만 하시죠” 입 다물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3·사진 왼쪽)이 최근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목격된 가운데 프랑스 유학 중인 아들 김한솔(19)은 ‘아버지(김정남)와 만났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한솔은 김 제1위원장의 조카이다.

주로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이 프랑스에 입국한 것은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러 온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오후(한국시간 2일 오전) 르아브르에 있는 파리정치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캠퍼스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기자를 만난 김한솔은 ‘파리나 르아브르에서 아버지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굳은 표정을 지으며 또렷한 한국말로 “그만하시죠”라고 짧게 말하고 기숙사 문을 닫고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대학 위의 대학’으로 불리는 그랑제콜 중 하나인 파리정치대학에 입학한 김한솔은 입학 이후 줄곧 기숙사 생활을 해 왔으며 올해 2학년으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지난해 5월 보스니아 국제학교인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모스타르 분교를 졸업했다. 이날 김한솔은 짙은 색 외투에 검은 빨데 안경을 쓴 차림으로 평범한 한국의 대학생과 같은 모습이였다. 김한솔과 같은 학년인 한 학생은 한국 기자에게 “김한솔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1년간 학교생활을 잘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솔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았었지만 이날은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걸어 기숙사로 돌아갔다. 김정남이 파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서도 김한솔은 이번 주 내내 매일 지방에 있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김한솔이 김정남을 만났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지난달 말 파리 시내 르메르디앙 에투엘 호텔에 머무는 모습이 출장 온 한국 대기업 직원에게 여러 차례 목격됐으며 9월 29일 호텔 로비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한국 기자와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날 이후 김

정남은 이 호텔에 나타나지 않아 거처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2일 05:40 송고한 「〈김한솔, 프랑스에서 ‘정상적 대학생’〉」 제목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연합뉴스 기사를 옮긴 것이고, 김한솔의 이력을 소개하는 일부 내용만 첨가했다. 또 현지에서 김한솔과 만난 연합뉴스 기사를 한국기자로 모호하게 기술했을 뿐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으로 위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호남매일 발행인 김 현 재
2.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솔

〈주문〉

호남매일 2015년 1월 26일자 6면 「박 대통령 쇄신카드와 여론의 향배」 제목의 사설, 무등일보 1월 28일자 19면 「최악의 연말정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이유〉

1. 호남매일, 무등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교체를 포함한 ‘쇄신카드’를 내놨다. 연초 청와대 개편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신년회견에 대한 여론의 역풍으로 국정동력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던 정홍원 총리를 바꾸는 등 내각 교체폭은 다소 확대됐으나 쇄신요구의 핵심인 청와대의 인적, 구조적 개편안이 ‘미완’인 것은 그만큼 쇄신안 발표의 시기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음을 보여준다. 연말정산과동을 거치며 이날 발표된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집권후 최저치다.

쇄신카드의 한 축은 총리교체다. 새누리당내 사정과 대안부재론 등으로 일단 정홍원 총리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완구 원내대표를 조기 등판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도지사과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으로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겸비한 만큼 3년차 국정운영을 내각에서 견인할 책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관리도 철저하다는 평이고, 범친박계로서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해 작년 총리후보자의 잇단 낙마사태를 불러온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 행사에서의 ‘각하’발언 논란에서 보듯 그가 책임총리로서 얼마나 소신있게 박 대통령의 부담을 나눠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주시대상이다.

문제는 청와대 쇄신여론의 향배다. 이번 발표에서 특보단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청와대 일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도 자리만 바꿔 청와대내에 남게되는 등 쇄신요구의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윤두현 홍보수석이 김 실장의 잔류 배경에 대해 “지금 청와대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김실장 교체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쇄신안을 ‘절반의 쇄신’ ‘미흡한 쇄신’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미완의 쇄신’ ‘현재진행형인 쇄신’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국민의 동조적 정서나 공감, 양해에 기댈 수 없고 오로지 업무성과만으로 평가받는 냉혹한 무대 한가운데서 일해야 한다는 백척간두의 위기의식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완’의 쇄신안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좀더 기다려

주기를 기대한다면 지금의 여론추이로 볼때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어보인다.

당장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둘러싼 세금과동을 거치면서 박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평가의 곱절에 달했다. 지지율은 지난해말 37%에서 신년회견후 35%, 30%로 연쇄 하락세를 이어갔고 모든 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청와대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만큼 차가운 것이다.

현재의 수석비서관 시스템에 더해진 특보단이 청와대의 소통강화와 업무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나 ‘미완’부분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우호적이거나 동조적일 가능성은 높지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는 아직 여론의 무거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박 대통령에게 쏠리게 된다는 엄혹한 사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박 대통령이 뚫고나가야할 국내의 현안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36600§ion=%EC%82%AC%EC%84%A4%EC%B9%BC%EB%9F%BC>>

(무등일보)= 『직장인들은 올해 최악의 연말정산을 경험 중이다. 몇몇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데 이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자료 일부 누락, 카드사의 잇따른 오류 등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조건이 바뀌면서 연말정산 과정이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져 직장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연말정산이 직장인을 위한 것인지 징세 당국의 편의를 위한 작업인지 모르겠다는 질타가 멈출줄을 모른다.

당장 BC·신한·삼성·하나카드 이용자 290여만명 중 대다수는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들 카드사가 일반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 1천600여억원의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이 신고한 주소나 상호명을 일일이 수기로 처리해

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카드사들의 자료를 믿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직장인들만 이중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됐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수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보완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직장인들만 괴로움의 연속이다.

카드사는 물론 보험사나 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사들이 국세청에 납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도 오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자체 자료를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 체계에서는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상 유무가 발견되지 않는다. 징세·금융 당국이 그동안 납세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밀하지 못했음이 여실히 입증된 셈이다. 늦었지만 국세청과 금융 당국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237080045931001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은 연합뉴스가 1월 23일 16:39 송고한 「박 대통령 쇄신 카드와 여론의 향배」 제목의 '연합시론'에서 세 문장만을 삭제한 채 제목과 본문을 그대로 베껴 위 적시 사실을 내보냈다.

무등일보의 위 사실은 국민일보 1월 27일자 27면 「카드사 잇단 오류까지... 옆친데 덮친 연말정산 파동」 제목의 사실에서 몇 개 문장과 단어를 침삭하거나 표현을 바꿔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이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사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호남매일은 신문윤리실

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 무등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50 신문윤리강령 위반

울산신문 발행인 조 희 태

<주문>

울산신문 2015년 2월 23일자 13면 「학교폭력, 감소된 게 아니라 숨어 있었다」 제목의 사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울산신문은 위 적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교육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수치는 13%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무려 62%가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사건 발생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돼 심의한 건수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는 격차가 너무 커 교육부 실태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3월 1일~8월 31일,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713건보다 9.8%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학생수 차이를 반영한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상반기 1.49건에서 작년 상반기 1.69

건으로 13.2%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공식 통계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2013년 상반기 학생 1,000명당 0.35건에서 작년 상반기 0.51건으로 43.5%나 늘어났다. 중학교는 작년 상반기 1,000명당 3.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고등학교는 1.68건으로 14.4% 각각 증가했다.

가해 유형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안이 예사롭지 않다.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이 32.8% 늘었고 명예훼손·모욕(30.5%), 상해(28.5%)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울산의 경우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이 지난해 상반기 1.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3건에서 62.1%나 늘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9월 15일~10월 24일) 결과, 작년 1차 조사(3월 23~4월 20일) 때보다 피해응답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고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라고 발표했다. 어떤 근거로 낮아졌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80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의 위 사설은 연합뉴스가 한 달 12일 전인 1월 11일 05:40 송고한 「'학교폭력 준 것 맞나'...교육부 조사 신뢰도 의문」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세 문장을 추가하고 몇 개 단어를 첨삭하거나 표현을 바꿔 전제한 것이다.

추가한 문장은 두 번째 『울산의 경우 무려 62%가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와 마지막 부분 『어떤 근거로 낮아졌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다』는 결론 대목 두 문장뿐이다.

그런데도 울산신문은 출처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표절이 사실 전달을 위한 것이며, 결론 대목은 독자적으로 작성했다

고하더라도 신문의 사설이 해당 신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얼굴'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주문〉

경북일보 2014년 6월 10일자 2면 「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제목의 기사, 新亞日報 6월 12일자 1면 「담배 피우면 빨리 늙는다/하루 담배 10개비, 피부노화 입증」·「'충격적 금연광고' 정부 구상, 현실 장벽에 수위 낮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북일보, 新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오는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과학

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분야의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기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 사회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또 타슈켄트 방문에 이어 18일에는 실크로드의 심장으로서 불리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후략) 김○○ 기자』

(新亞日報) <담배 피우면...>= 『“담배를 피우면 더 빨리 늙을까?”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45) 교수 연구팀이 담배가 피부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조 교수의 연구팀이 최근 젊은층 흡연자들의 고밀도지단백질(HDL) 변형이 70대 노인들의 혈청에서 일어나는 양상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이런 HDL 변형이 피부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영남대 교비기자재지원사업의 하나로 2년 동안 연구를 해 온 조 교수팀은 흡연과 피부노화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20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혈청 단백질을 비교 분석했다.(후략) 김○○ 기자』

<‘충격적 금연광고’...>= 『흡연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한 금연광고를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수위가 조절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흡연폐해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외국의 금연광고와 같은 ‘강도 높은’ 금연광고를 만들어 TV와 영화관, 유튜브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내보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광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광고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광고제작사는 다소 불편감을 줄 정도의 혐오 영상을 보고 일부 시청자가 반발해 아예 금연광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의 공익광고팀에 사전에 문의했더니, 예상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다.(후략) 오○○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6월 10일 10:30 송고한 「朴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제목의 기사를, 新亞日報는 연합뉴스가 6월 11일 09:56 송고한 「하루 담배 10개비, 피부노화 촉진 입증」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10:13 송고한 「충격적 금연광고...현실 장벽에 수위 조절(종합)」 제목의 기사를 각각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김 용 석

<주문>

서울일보 2014년 6월 2일자 1면 「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 한민구/靑, 鄭총리 제청 받아 국방부 장관 지명...국정원장 내정자 현재 검증중」, 6월 10일자 1면 「靑, 총리 인선 고민...이번주 마무리 될 듯/朴대통령, 일정 비우고 내각 개편 고심...정총리 각료 제청권 행사 관측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월 2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공식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

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김 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 간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 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6월 10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외부일정을 모두 비우고 청와대에서 새 국무총리 인선 등을 비롯해 초읽기에 들어간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두고 속고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안에 적어도 후임 총리 지명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이번 주에는 총리 인선이 이뤄져야 이후 개각의 새 틀 짜기를 본격화할 수 있는 데다 지난달 말 안대회 전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선거 뒤 개각 일정을 본격화하려던 계획이 다소 늦춰졌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8일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돌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후임자 인선만 발표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새 총리 지명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오후에라도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는 뉴시스가 6월 1일 10:54 송고한 「朴대통령, 안보실장 김관진-국

방장관 한민구 내정」, 6월 9일 11:03 송고한 「朴대통령, 일정 비우고 내각·靑개편 고심」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4.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5.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1월 3일자 3면 「김여정, ‘북2인자’ 최룡해 차남과 결혼설」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월 3일자 2면 「“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실세 최룡해 아들<차남 최성>과 결혼」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월 3일자 4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최룡해<北 2인자> 차남과 결혼”」 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월 3일자 5면 「김여정, 최룡해 차남과 결혼설」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월 3일자 4면 「김정은 동생 김여정/최룡해 차남과 결혼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상기 5개지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28)이 지난해 ‘북한 2인자’ 최룡해 당 비서 아들과 결혼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룡해 비서는 2남1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남은 30대 후반 최준, 차남은 30대 초반인 최성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성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자에서 김 제1비서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을 수행한 김 부부장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에서 김 부부장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사진)를 끼고 있었다. 지난해 3월 김 제1비서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끼고 있지 않던 반지다.

최룡해 비서는 차남을 김여정과 결혼시키면서 권력 핵심으로 진입했고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처형될 때까지 40여년간 '2인자'로 자리매김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결혼으로 권력 중심에 들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197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여동생인 김정희와 결혼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최룡해 비서는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면서 잠시 서열이 밀렸지만 같은 해 10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되며 서열 2위에 복귀했다. '백두혈통'인 김정은 가문과 맺은 혼맥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룡해 비서 아들과 김여정 부부장의 결혼설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22153345>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28) 노동당 부부장이 2인자인 최룡해 당 비서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당국은 2일 "결혼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결혼 상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해 최 비서 아들과 결혼했다는 설(說)은 중국 측 정보통을 통해 전해졌다.

최 비서가 슬하에 2남 1녀를 뒀고, 장남은 30대 후반의 최준이며 차남은 30대 초반의 최성인데 차남이 김 부부장과 결혼했다는 소문이다. 최성의 직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최 비서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유교적 전통을 가진 북한 사회 분위기상 결혼을 통해 공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김 제1비서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 부부장과 결혼시키면서 '로열패밀리'로 올라 섰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향후 북한의 국정 운영에서 장기간 2인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는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며 잠시 서열이 밀린 바 있다. 그런 그가 같은해 10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되며 서열 2위에 복귀한 것도 김씨 가문과 맺은 혼맥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 부부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자주 드러낸 시점과도 일치한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김 부부장과 결혼 사실이 반지 착용으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비서의 가족사항과 차남이 김 부부장과 결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비서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에 김여정이 동행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여정은 수첩과 펜을 들고 있으며 왼손 약지(네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3월 김 제1비서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반지를 끼고있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들이 결혼할 때 신랑측으로부터 반지를 예물로 받고 결혼을 의미하는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결혼 사실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03533>>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8)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김여정이 결혼했으며 배우자는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당비서의 차남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 제1위원장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

문을 수행한 김여정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김여정은 왼쪽 네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반지를 끼지 않고 있었던 만큼 그 이후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들이 결혼할 때 신랑 측으로부터 반지를 예물로 받고 결혼을 의미하는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여정의 결혼 상대는 최 비서의 차남 최성으로 알려졌다. 30대 초반으로 알려진 그의 현재 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최룡해의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 받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보수적이고 유교적 전통을 가진 북한사회 분위기상 결혼을 통해 미혼 여성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한 부담을 덜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비서는 아들을 김 제1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과 결혼시켜 김정은과 사돈을 맺으면서 로열패밀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며 잠시 서열이 밀렸던 최룡해가 같은 해 10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되며 서열 2위에 복귀한 것도 김씨 가문과 맺은 혼맥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e20150102180033120280.htm>〉

(중앙일보)= 『북한 김정은(3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6) 노동당 부부장이 최룡해 당비서의 차남 최성과 결혼했다는 설이 2일 제기됐다. 최룡해는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며 실각설이 제기됐지만 10월 서열 2위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했다. 최성은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직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평양육아원·애육원(고아원) 방문 소식을 전하며 왼손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낀 김 부부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에서도 여성들은 왼손 넷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낀다. 김여정은 지난해 3월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당시까진 반지를 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 사이에선 김여정이 최성과 결혼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여정이 최성과 결혼한 게 확인될 경우 최성도 조만간 권력 중심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의 고모,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도 숙청 전까진 북한 2인자로 활동했다.

최근 오빠 김정은의 군사훈련 참관까지 수행한 김여정은 이날 새해 첫 공식 현지지도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올해 정권 중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여정이 첫 일정부터 등장한 건 김정은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부각하는 등 '백두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날 김정은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고아원을 찾은 것 역시 신년사와 관련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개선'을 다섯 번 언급했다. "주민들의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거나 "학생들을 위한 질 좋은 학용품·식료품을 생산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1/03/16411585.html>〉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28)이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당비서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최룡해 당비서의 차남으로 30대 초반인 최성과 결혼했다고 전했다. 김여정의 남편인 최성의 직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일 공개한 김정은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 행사 사진에서 김여정의 왼손 네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김여정의 결혼설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여정은 지난해 3월 김정은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반지를 끼지 않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부부장의 직함을 부여받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기 시작한 것도 결혼 직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유교적 전통을 감안할 때 미혼 여성으로 대외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났던 최룡해가 10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것도 김씨 가문과의 혼맥 덕분이라는 말도 나온다.』

<<http://www.hankookilbo.com/v/74c812f98801488385db897c8784e12d>>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당비서 차남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는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는 1월 2일 15:48에 송고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2인자 최룡해 아들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믿을 만한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결혼설을 보도했다. 또 최룡해의 가족관계, 이 결혼에 따른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관련 기사를 송고한 이후 3일자에 보도된 것으로 대부분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 범위 내에서 관련 결혼설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이 연합뉴스가 다룬 내용이다. 일부 표현은 연합뉴스 기사와 똑 같다. 그럼에도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의 보도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한겨레, 세계일보 등 같은 날짜에 위 내용을 전하면서 연합뉴스의 보도 사실을 밝혔고, 서울신문은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 출처를 명시했다.

상기 5개지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2014-119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문〉

경남매일 2014년 6월 10일자 9면 「5만원권 신사임당 어디로 갔나/5년간 1인당 18장 풀려…지난해 환수율 49%」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신사임당이 꼭꼭 숨었다.”

5만 원권이 발행 5년 만에 유통되는 화폐 잔액의 70%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면서 화폐 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중에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는 5만 원 권은 갈수록 줄어 지하경제의 ‘검은 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는 28.6%까지 떨어져 2009년 4분기(10~12월)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것과 관련, 지방선거 등에 따른 비자금 확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5만 원권 발행 잔액은 43조 8천510억 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64조 4천540억 원)의 6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수로는 8억 7천702만 장으로 국민 1인당 17.8장씩 갖고 있는 셈이다.

2009년 6월 23일 첫선을 보인 5만 원권은 그해 말 9조 9천230억 원어치가 발행된 이후 매년 7조~8조 원씩 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전체 화폐잔액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말 28.0%에서 2011년 말 55.7%, 2013년 말 66.5%로 빠른 속도로 커졌다.

반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 원권에 자리를 내주며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374만 2천건에서 지난해 112만 9천건으로 뚝 떨어졌다.(후략) 박○○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은 東亞日報가 지난 6월 6일자 16면에 보도한 「5만원권 5년간 1인당 18장꼴 풀렸는데…/‘신사임당 어디로 갔나」 제목의 기획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첫째와 세 번째 문장만을 추가했는데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4. 세계일보 발행인 조 한 규
5.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머니투데이 2014년 3월 26일자 9면 「돈 빠지는 러…경기침체 경고」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3월 27일자 A10면 「佛 위성사진에 말레이機 추정잔해 122개」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4월 4일자 12면 「이탈리아 베네치아 독립 폭력사태 모의 적발」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4월 7일자 29면 「화가 부시 ‘리더십의 예술’ 캔버스에 담다」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21일자 A18면 「유럽 시민들, 매년 히틀

러 生家 앞에서 나치 희생자 추모」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자본 유출로 몸살을 앓는다. 모스크바 증시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며 러시아 경제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안드레이 클레파치 러시아 경제차관은 24일(현지시간) 올 1분기에 650억-700억달러(75조4250억원)의 자본이 유출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유출액 630억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이 최근 제시한 예상치(500억달러)도 초과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자본이 썰물을 이루는 것은 서방의 제재 위협 탓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부호) 4명을 비롯한 푸틴 권력 핵심층 20명과 은행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클레파치 차관은 서방의 제재가 아직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관계가 악화되는 게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 유출은 전부터 상당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관계가 냉각되면서 훨씬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FDI(외국인직접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독일 기업들도 추가 투자를 위해 현지 자회사에 쌓아둔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다.

회계컨설팅 회사인 KPMG는 “많은 기업이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러시아에 수익을 남겨뒀지만 자본이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방이 지금까지 발표한 제재 조치로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무역과 경제를 직접 겨냥한 추가 조치가 나오면 러시아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올 들어 모스크바

증시 대표 지수인 MICEX 지수는 14% 하락했고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9% 떨어졌다. 김○○ 기자』

(매일경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MH370기가 인도양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26일 프랑스가 인도양 상에서 위성으로 찍은 122개의 의심스러운 물체가 공개됐다.

히스하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난 25일 프랑스 에어 버스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다”면서 “이 물체들은 23일 찍혔다”고 밝혔다. 이 물체들은 호주 퍼스에서 2557km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물체들 중 하나의 길이는 23m였으며, 일부 물체들은 밝고 딱딱한 물질로 보였다”면서 “추락 항공기와와의 연관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색하는 데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추락 지점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총 6개국에서 12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호주 당국은 “7대는 군용, 5대는 민간 항공기”라고 밝혔다.

이날 수색에는 한국 항공기 2대도 참가했다. 이날 수색에 참가한 6개국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다. 동시에 군함들도 해양지역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가 최종 위성 신호 송신을 끝내고 난 후 다시 불안한 형태의 신호(ping)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새로운 단서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운항 내내 1시간마다 신호를 보냈던 비행기가 마지막 신호를 보낸 후 8분 뒤에 다소 불안한 형태의 신호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것이다.

마지막 신호와 관련해 인공위성과 접속을 다시 시도했거나, 기체 시스템을 초기화했는지 등 여러 원인을 가정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마셋 측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외부 통신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성 여부는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공기 실종과 관련해 계속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비행기 기장이 지난 8일 실종 당일 도무지 비행할 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그의 동료에 의해 제기됐다.

말레이시아항공의 한 동료 조종사는 이날 뉴질랜드헤럴드에 “기장이 심각한 가정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그의 아내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상당히 격앙됐고, (이후) 한 번도 날아가 본 적이 없는 세상으로 비행기를 몰기로 결정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기자』

(국민일보)=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세력 수십 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섰다.

이탈리아 경찰은 2일(현지시간) 북동부 베네치아와 인근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모의한 혐의로 프랑코 로체타 전 의원 등 2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포함한 여러 계획을 모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이외에 다른 2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치아에서는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 분리 독립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었다.

분리독립주의자들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 12mm 구경의 대포를 장착한 탱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탱크는 트랙터를 탱크 모양으로 개조한 것에 불과했다. 이들은 다음달 열릴 유럽의회 선거일 하루 전날 이 탱크를 앞세워 산마르코 광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이탈리아 사정 당국에 따르면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과 폭력 행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려 했다. 이번 경찰 체포는 베네치아를 주도로 하는 베네토주 지역 정치인들이 헌법으로 금지돼 있는 분리 독립 절차를 공식적으로 착수하려 하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베네치아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민법 완화 방안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국회는 현재 몰래 입국한 사람들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리독립주의자들로 구성된 지역 정당인 리가 베네토당은 6일 베네치아 인근 베로나에서 이번 체포와 이민법 완화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리가 베네토당의 지도자인 마시

모 비톤치는 “중앙정부의 압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베네치아의 상징인) 성 마르코기를 게양해서 부당하게 체포된 이들이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앞서 실시된 베네치아 독립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베네치아와 인근 주민의 89% 이상이 이탈리아에서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했던 지안루카 부사토는 정부가 분리독립주의자들을 검거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 기자』

(세계일보)= 『아마추어 화가로 변신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세계 지도자 30명의 초상화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텍사스주 델러스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리는 ‘리더십의 예술: 대통령의 개인 외교’ 전시회를 통해서다. 외신들은 2001년 9·11 테러를 통해 강경한 ‘전쟁대통령’을 자임한 그가 예술적 성향을 나타낸 것이 놀랍다고 평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난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애정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묘사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 대해 “애정을 듬뿍 담아 그렸다”며 “그의 열정과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과 함께 아버지 부시의 초상화도 전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상화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수필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2년 전부터 붓을 잡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나는 대단한 화가가 아니다. 대중들이 이 초상화를 보고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화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기자』

(朝鮮日報)= 『아돌프 히틀러 생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3시(현지 시각) 오스트리아와 독일 사이 국경 마을 브라우나우암인.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모인 시민 600여명이 ‘극우 폭력에 함께 맞서자’고 쓰인 빨간 현수막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이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125년 전 히틀러가 태어나 세 살까지 살았던 곳이다.

브라우나우암인은 수십년 동안 네오나치의 ‘성지(聖地)’로 꼽혔다. 나치 추종 세력이 찾아와 꽃을 바치고, ‘우리는 갈색(나치의 상징색)으로 남을 것’ ‘잘 자라 좌파’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반(反) 극우주의’ 운동에 나섰다. ‘우리에게도 나치의 죄를 알릴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히틀러 탄생 100년이었던 1989년 나치 희생자 추모비를 만든 이후 해마다 극우주의 반대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10년 전부터는 시민단체들도 합류, 매년 4월 20일 히틀러 생일 즈음해 마을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치 없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구호 아래 열린 올해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 시민단체 48개가 참석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던 에스더 베하라노(90)씨도 이곳을 찾았다. 흑시 발생할 수 있는 네오나치의 공격에 대비해 경찰들도 함께 행진에 나섰다. 행사를 주최한 아스트리드 하인츠씨는 히틀러 생가(生家) 앞 나치 희생자 추모비를 가리키며 “이 비석이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치 추종자들의 만행을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추모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자 수백만 명이 경고한다. 다시 파시즘이 일어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나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독일은 나치를 인정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민주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나치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회 등에서 나치를 승인, 찬양하면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된다. 대표적 만행 ‘인종 학살’을 부인하면 최대 5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모양 십자가)’ 등을 사용해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양○○ 기자』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상기 신문의 기사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이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으며 그렇다고 뉴스의 출처를 따로 밝히지도 않았다.

기사마다 각사 외신부(국제부)에 근무하는 기자 이름을 달았으나, 이들이 기사 내용에 각각 언급된 안드레이 클레파치 러시아 경제차관의 발언, 회계컨설팅회사 KPMG의 분석, 히스하우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의 발표, 위성회사 인마셋의 추정, 이탈리아 지역정당인 리가 베네타당 지도자인 마시모 비톤치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발언, 아우슈비츠 수감자 등의 발언 내용 등을 직접 취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국내에 있는 기자가 외신이나 외국 매체의 기사를 번역해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매체의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5년 2월 11일자 「나훈아, 아내 정수경씨와 이혼소송…월 5000만원 저작권 다툼으로 번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수경 씨 간 이혼 소송이 저작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8년째 공식 활동이 없는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 측은 11일 한 매체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훈아가 월 5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한 후 저작권 수입과 관련된 재산 분할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훈아는 ‘무시로’, ‘잡초’, ‘갈무리’ 등 그의 대표곡을 포함해 약 800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측의 추산대로 월 5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면 나훈아가 보유한 저작권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원 측은 “그 동안 정 씨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나훈아 측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만간 재판이 열릴 것”이라며 “저작권이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측은 이어 “정 씨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훈아를 비방하거나 네거티브 전략을 쓸 생각은 없다”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2111458293&sec_id=540101&pt=nv〉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 「나훈아, 아내 정수경씨와 이혼소송…월 5000만원 저작권 다툼으로 번져」 제목의 기사는 이보다 3시간 전에 보도된 문화일보의 단독기사인 「나훈아 이혼소송 “월 5000만원” 저작권 다툼 비화」를 표절한 것이다.

이 기사는 부분적으로 문화일보와 다르나 이는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사에 “한 매체에 따르면”이라고 적어 표절을 피한 듯 했으나 이를 두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매체가 그랬던 것처럼 ‘문화일보’라는 단독기사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6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전자신문 발행인 구 원 모

〈주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4년 7월 14일자 「장국현, 금강송 25그루 베고 벌금 500만원, 사진은 한장당 500만원에 팔아」 제목의 기사 외 1건, 전자신문(etnews.com) 7월 14일자 「사진작가 장국현, 소나무 사진 위해 220년 된 소나무를 싹둑?」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 전자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1)= 『장국현, 금강송 25그루 베고 벌금 500만원, 사진은 한장당 500만원에 팔아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249050&cloc=>

(일간스포츠 2)= 『금강송 베고 500만원 선고받은 장국현 작가, 해명이 더 황당

장국현 금강송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으며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장국현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250201&cloc=>

(전자신문)= 『사진작가 장국현, 소나무 사진 위해 220년 된 소나무를 싹둑?

사진작가 장국현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소나무를 맘대로 베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면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사진)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사진작가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면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http://www.etnews.com/2014071400003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 「장국현, 금강송 25그루 베고 벌금 500만원, 사진은 한장당 500만원에 팔아」 제목의 기사 외 1건은 이보다 1시간여 앞서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기사를 일부 고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특히 장국현 씨의 해명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전자신문 「사진작가 장국현, 소나무 사진 위해 220년 된 소나무를 싹둑?」 제목의 기사도 한겨레의 기사를 일부 잘라낸 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2014-136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김 용 석

<주문>

서울일보 2014년 12월 3일자 1면 「담양 죽녹원, 첫눈이 선사한 그림 같은 설경」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서울일보는 담양군이 제공한 사진을 1면에 큼지막하게 전재하고도 마치 자사 기사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사진 설명 끝에는 자사 기자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일보 12월 3일자 1면

▲ 2014-13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2. 울산매일 해인 이 연 희

<주문>

경상일보 2014년 9월 24일자 1면 「“회사와 개인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 제목의 기사의 사진, 울산매일 9월 24일자 1면 「“경영난으로 실망 안긴 회사에 책임질 기회 달라”」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상일보 9월 24일자 1면



울산매일 9월 24일자 1면

경상일보, 울산매일은 현대중공업 권오갑 신임사장이 지난 9월 23일 출근길 사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담은 현대중공업 제공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3.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주문〉

경북매일 2015년 1월 7일자 2면 「도청 신도시 조성공사 빈틈 없게」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경북일보 1월 7일자 4면 「서초 세모녀 살해 40대 가장 문경서 검거」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대구일보 1월 7일자 3면 「신도시 조기 활성화' 국비 추가확보 당부」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북매일 1월 7일자 2면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10>



경북일보 1월 7일자 4면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76599



대구일보 1월 7일자 3면

<http://www.idaegu.com/?c=5&uid=308580>

경북매일, 대구일보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도청 신청사 건설현장을 방문한 장면을 담은 경상북도 제공 사진을, 경북일보는 문경경찰서가 제공한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 압송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